

한일전문가 도쿄 심포지엄…"역사갈등 극복하며 통일협력해야"

기사입력 2016/06/10 18:05 송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과 일본 양국이 역사인식 문제를 풀어 가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양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10일 도쿄 학사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국제심포지엄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한일 양국이 군 위안부 합의(작년 12월 28일)로 역사인식 문제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은 큰 성과"라며 "역사에 사로잡혀있던 두 나라가 조금씩 역사에 대한 고리를 약화하면서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역사문제가 모든 문제의 앞길을 막는 것은 한일 양쪽에 모두 불행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양국은 역사에 붙잡혀 있으면 둘 다 손해 보는 것이 많고, 역사문제를 방치한 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다"며 "역사(문제)를 극복해가며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이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느냐는 비전이 필요하고 그것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안보·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이슈를 찾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은 "남북관계를 놓고 보면 통일 프로세스에 접어들고 있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서 일본의 협력이 경시되는 것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통일과 관련한 '일본 변수'는 절대 적지 않다"며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이해 당사국이며, (북일 청구권 협상이 타결될 경우) 100억 달러(약 11조 7천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되는 일본의 대북 청구권 자금 제공은 북한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의 자유 민주주의와 비핵화, 인권 및 법치를 보장하는 통일이라면 일본은 한국 통일에 반대하거나 저지하려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로 흐르는 동북아에서 한일 양국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다"며 21세기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을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1965년 수교 이후) 이제까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하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야말로 양국의 새 시대를 여는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와타나베 도시오(渡邊利夫) 다쿠쇼쿠(拓殖)대 전 총장은 "일한이 화해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화해를 조정하고 풀어가는 지혜가 양국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이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일 일본 도쿄 학사회관에서 동아시아국제심포지엄이 열린 모습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오른쪽에서 2번째),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오른쪽에서 3번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오른쪽에서 5번째) 등이 참석했다. (도쿄 연합뉴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10 18:05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